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77호
2016. 9. 19

정책동향

| 우리나라 건설업 GDP와 노동생산성, 주요국과 상이

시장동향

| 2016년 7월 미분양 주택, 6만 3,127호
| 건설기업 인력, 정규직과 관리자급 증가

산업정보

|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
| 건설 보증기관,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키워야

건설논단

| 공동도급제도 정상화,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우리나라 건설업 GDP와 노동 생산성, 주요국과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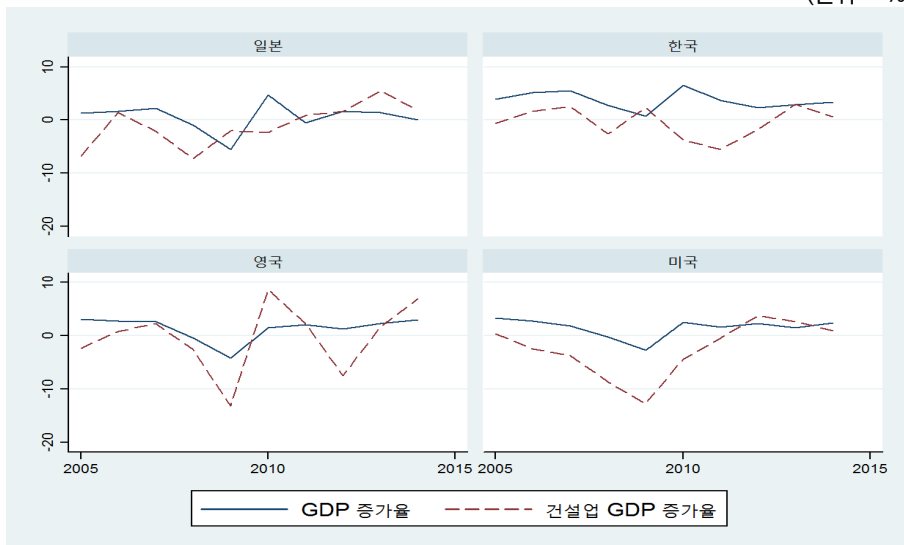
-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설업 부가가치 정체 -

■ 우리나라의 경우 GDP 증가율-건설업 GDP 증가율의 움직임이 주요국과 상이

- <그림 1>과 같이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의 GDP 증가율과 건설업 GDP 증가율 간 상관관계수는 한국 -0.18, 미국 0.79, 일본 0.12, 영국 0.73으로 분석됨.
- 한국은 최근 건설업 GDP 증가율의 수준도 GDP 증가율을 하회함. 특히, 한국의 건설업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의 증가율을 기록함.

<그림 1> 건설업 고용 증가율과 건설업 GDP 증가율 상관관계

(단위 : %)



주 : 2010년 US\$ 불변가격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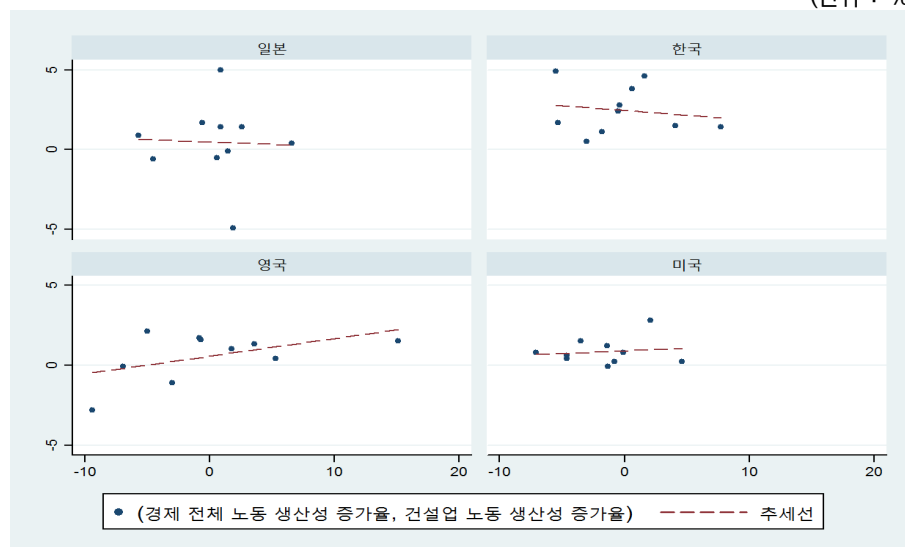
자료 : OECDstat, Real GDP growth, Real value added in construction growth rate.

■ 경제 전체 노동생산성과 건설업 노동생산성, 한국·일본은 부(-), 미국·영국은 정(+)의 상관관계

- 최근 10년(2005~2014년) 동안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상관관계수는 한국 -0.16, 미국 0.13, 일본 -0.04, 영국 0.50로 분석됨(<그림 2> 참조).

- 이러한 결과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노동의 투입이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인 측면이 있고¹⁾, 건설업 관련 경직적인 제도의 영향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사료됨.
- 건설업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productivity) 충격에 대해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 산업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2>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상관관계
(단위 : %)



주 : 가로축은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세로축은 건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임. GDP는 2010년 US\$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Database, Gross value added per person employed(constant prices).

■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혁 필요

- 해외 주요국에 비해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는 정체되어 있고, 건설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아 건설업체 1개사당 부가가치 증가도 주요국에 비해 정체된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의 건설업 시장 규모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최근 5년 간(2010~2014년) 연평균 2.0% 증가하는 데 그침. 반면, 영국은 7.0% 늘어났고, 미국과 일본도 4.7% 증가함.
 - 건설업체 수 증감률은 미국 -1.2%, 일본 -2.1%, 영국 -0.4%를 기록한 데 비해 한국은 0.0%로 변화가 거의 없음.
 - 특히, 주요국 중에서도 영국 건설업의 괄목할 만한 부가가치 증가를 가져온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고,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1) 건설업 부가가치가 낮아질수록(건설업 경기가 불황일수록) 노동 투입이 증가해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의미함.

2016년 7월 미분양 주택, 6만 3,127호

-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 급증할 가능성 높아 -

7월 미분양 주택은 3,128호 증가한 6만 3,127호, 기타 지방·중형 큰 폭 증가

- <표 1>과 같이 2016년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3,128호 증가한 6만 3,127호 수준을 보이며, 3개월 연속 1,000호 이상 증가함.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742호 증가한 1만 1,527호 수준을 보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는 감소한 반면, 기타 지방은 크게 증가함.
 - 수도권은 전월 대비 1,932호가 감소한 2만 1,393호를 기록함. 지방 광역시는 465호가 감소한 5,232호 수준임.
 - 반면, 기타 지방은 전월 대비 5,525호가 증가한 3만 6,502호 수준임.
- 규모별로는 소형(60㎡ 이하)은 감소한 반면, 중형(60~85㎡)과 대형(85㎡ 초과)은 증가함.
 - 소형은 전월 대비 234호 감소한 9,376호 수준임.
 - 반면, 중형은 2,651호가 증가한 4만 4,702호 수준임. 대형은 711호가 증가하여 9,049호 수준을 기록함.

<표 1>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분	2015. 7	2016. 6	2016. 7	전월비		전년 동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3,177	59,999	63,127	3,128	5.2	29,950	90.3
(준공 후)	(12,062)	(10,785)	(11,527)	(742)	(6.9)	(-535)	(-4.4)
수도권	15,936	23,325	21,393	-1,932	-8.3	5,457	34.2
지방 광역시	3,012	5,697	5,232	-465	-8.2	2,220	73.7
기타 지방	14,229	30,977	36,502	5,525	17.8	22,273	156.5
60㎡ 이하	7,903	9,610	9,376	-234	-2.4	1,473	18.6
60~85㎡	19,952	42,051	44,702	2,651	6.3	24,750	124.0
85㎡ 초과	5,322	8,338	9,049	711	8.5	3,727	70.0

자료 : 국토교통부.

- 시도별로 살펴보면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에 향후 분양 물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 2>와 같이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분양 물량은 20만호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경기, 경남, 충남, 경북 등에 분양 물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분양 예정 물량(2016. 8~12)과 미분양 주택(2016. 7)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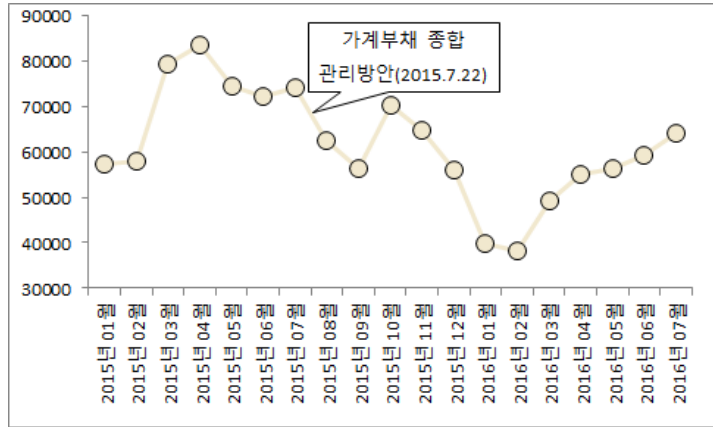
(단위 : 호)

순위	분양 예정 물량	미분양 주택
1	경 기 79,645	경 기 17,243
2	서 울 29,583	경 남 9,737
3	경 남 14,815	충 남 8,644
4	충 북 11,005	경 북 6,198
5	경 북 10,802	충 북 4,428
6	부 산 10,758	인 천 3,724
7	인 천 10,655	강 원 3,061
8	강 원 8,685	전 북 2,518

자료 : 부동산114(주), 국토교통부.

<그림 1>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

(단위 : 호)



자료 : 한국감정원.

■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 이후 재고 아파트 거래 감소

- 정부는 2015년 7월 22일 주택담보대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발표 이후 <그림 1>과 같이 재고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함.
 - 대책 발표 이후 2016년 2월까지 3만 5,887호가 감소하였으며, 2015년 7월 대비 48.4%가 줄어 듦. 2015년 10월을 제외하고 6개월 동안 감소함.
 - 2016년 2월 이후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 7월은 대책 발표 이전의 86.2% 수준을 보임.

■ 금년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분양 시기 조정 등 검토 필요

-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에 분양 예정 물량도 많고, 최근에 발표(8.25)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주택 수요의 위축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분양 시기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은 분양가 할인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책 발표로 주택 수요도 위축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재고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대책 발표 이후 7개월이 지난 이후 서서히 수요가 회복세를 보임. 현재 분양 예정 중인 물량의 분양 시기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건설기업 인력, 정규직과 관리자급 늘어

- 최근 5년 간(2011~2015년) 건설기업 인력 구조 변화 분석¹⁾ -

■ 최근 건설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주요 이슈

- 지난해 건설 수주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지속되어 온 건설경기 침체와 향후 건설·주택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건설기업은 인적자원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우선 건설경기의 급격한 변동은 건설기업이 인력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또한, 사업간 인력 배분에 있어서도 건축, 토목, 주택, 플랜트 등 사업 부문간의 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사업 부문간 인력 배분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와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적기에 해당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기의 불확실성 증가는 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건설기업에게 인력의 적정 규모와 효율적인 인력 배분은 사업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건설사업 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 부문의 전략적인 대응과 함께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인력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건설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인력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과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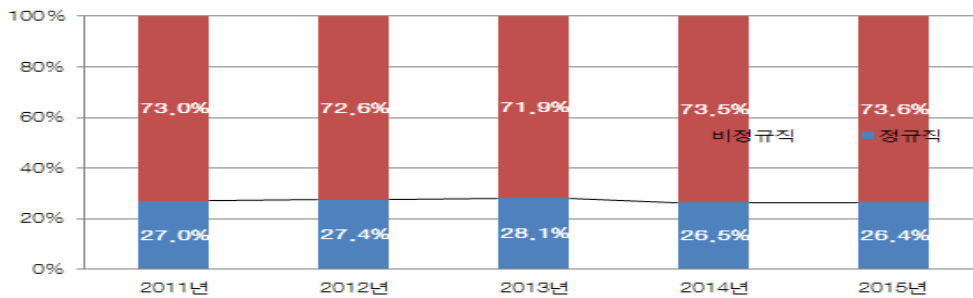
■ 최근 5년 간(2011~2015년) 건설기업의 인력 구조 변동 추이 분석

- 먼저,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이하 건인회)의 인원 현황 자료²⁾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평균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인원 비율은 72.9% 대 27.1%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이후 꾸준히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간제법의 개정과 함께 정규직 전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 특히, 건설기업의 비정규직은 프로젝트 전문직, 현장 계약직 등 현장 인력과 본사 기간제 및 파견직 인력으로 분류되는데, 비정규직의 감소세 중에서도 본사에 근무하는 본사 기간제 및 본사 파견직 인력의 축소가 뚜렷이 나타나 이러한 정규직 전환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1)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에서 매년 취합하는 인력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자료임.

2) 건인회 회원사는 대형과 중견, 중소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교적 건설기업의 인력관리 특성을 조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그림 1> 최근 5년 간 건설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변동 추이



출처 : 건인회 연도별 『건설업체 임금·복리후생제도현황』.

- 다음으로, 전체 인력(단, 기업 내 정규직, 비정규직 인력 포함)에서 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5년 간 평균 3.0%로 나타나고 있음.
 - 국내 100대 기업들의 평균 임원 비중인 0.92%에 비하면 높은 비중으로서 한 기업 내 사업 부문이 다양하고, 직면하는 의사결정의 상황이 다양한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됨.
- 최근 5년 간 건설기업의 직급별 인력 구조를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표 1>과 같이 상대적으로 간부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급(부장, 차장, 과장)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3년 간의 자료만 분석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뚜렷함.
 - 이는 2010년 이후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이 많지 않았고, 시장 환경 변화로 사업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 최근 5년 간 건설기업의 직급별 비중

(단위 : %)

연도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2011년	13.8	22.6	22.8	22.3	18.4
2012년	17.0	24.6	24.6	19.8	14.0
2013년	16.6	23.7	23.6	19.7	16.8
2014년	16.6	24.1	23.0	19.9	16.5
2015년	17.0	24.6	24.6	19.8	14.0

주 : 주임 직급이 있는 경우 사원 직급에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 <표 2>와 직군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기술직군에서 관리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시공 경험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기술 인력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 관리직과 기술직의 직급별 현황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기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기타
관리직	18.0	19.9	20.5	16.3	14.0	4.8	17.4	20.0	20.6	16.6	13.6	5.4
기술직	18.2	23.4	22.5	19.3	12.8	1.1	19.1	24.2	21.8	19.5	11.4	1.4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핵심 역량

- ‘의사소통 능력’,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혀 -

■ 기업이 바라는 인력 조달 어려워

-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건설산업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설계, 조달, 시공) 사업 중심으로 주류를 옮겨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유능한 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 많은 건설업체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사업 경험, 외국어 능력,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찾기 힘들다고 언급함.¹⁾

■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13가지 핵심 역량

- 미국공학학회(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 ASEE)는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필요한 13가지 역량을 정의함.²⁾
- ①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수용(受容)하기
- ②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기
- ③ 몇몇의 관심 있는 국가의 역사, 정치, 경제 시스템과 친숙해지기
- ④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 제2외국어를 말할 수 있기
- ⑤ 전문 기술 분야는 제2외국어를 전문가 수준으로 말하기
- ⑥ 윤리적,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팀을 구성해 일하기
- ⑦ 문화적 혹은 국가적 차이로 인해 야기된 윤리적 이슈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기
- ⑧ 제품 디자인, 제조, 사용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 ⑨ 국가들의 상호 연결성과 국제 경제 이해하기
- ⑩ 엔지니어의 업무가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접근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기
- ⑪ 공급망 관리, 지적 재산, 법적 책임과 위험, 사업 수행 등 국제적 측면의 주제에 관심 가지기
- ⑫ 국제적 인턴십, 서비스 학습 기회, 가상의 국제적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제적 상황

1) 건설경제, 미래건설 짚어질 인재가 모자란다<기획 좌담회>, 2012.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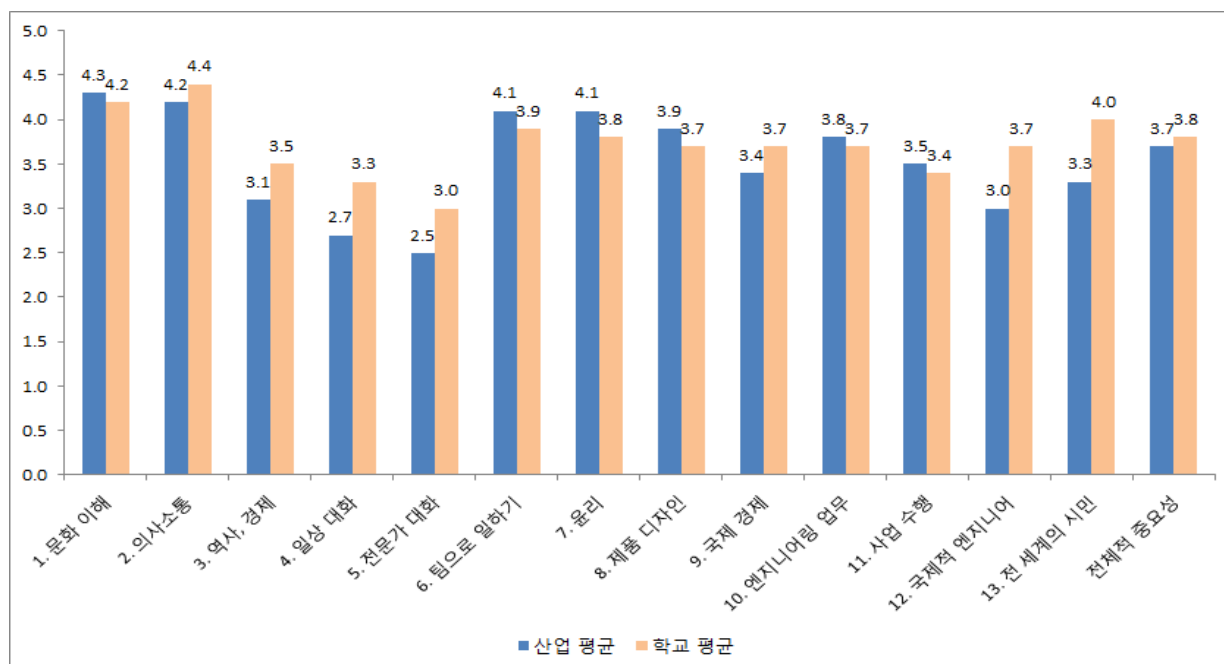
2) ASEE(2011), Defining global competence for engineering students.

에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 ⑬ 스스로를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민으로서 생각하기. 즉,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 빈곤, 안정, 공중 보건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인식하기

- 이와 같은 13가지 역량 중에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의사소통 능력’과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음. 다음으로, ‘팀으로 함께 일하기’, ‘윤리적 이슈 효율적으로 다루기’가 뒤를 잇고 있음.

<그림 1> 글로벌 엔지니어가 가져야 할 13가지 역량에 대한 집단별 중요성 평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 협동을 통한 현실적인 육성책 마련 필요

-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급선무임. 미국공학학회가 제시한 13가지 역량에서 알 수 있듯이 학계에서도 ‘이론’이 아닌 ‘융합’, ‘소통’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디자인·조달·엔지니어링·CM·PM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지만 업계는 이에 맞는 인재가 부족하다고 호소함. 따라서 핵심 기술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학 협동을 통한 현실적인 인재 육성책 마련이 필요한 때임.

최은정(책임연구원 · kciel21@cerik.re.kr)

건설 보증기관,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역량 키워야¹⁾

- 체계적 데이터·정보 분석을 통한 조기경보 기능 확보 필요 -

■ 해외 건설시장의 지속 성장으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2015년부터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시장 규모는 여전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2023년 시장 규모는 2010년에 비해 50% 이상 성장할 전망²⁾).
- 국내 건설기업의 주력 시장인 중동 일부 국가를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최근 발주되는 사업은 도급 형태에서 기획·제안형 사업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 발주처의 사업 보증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되고, 사업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건설 보증기관의 사업 타당성 분석 역량 강화가 절실함.
- 해외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적·기술적 사업성 평가 체계는 재무적 리스크 평가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건설 보증기관과 다소 차이가 있음. 향후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기관은 리스크 기반의 사업성 평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S&P社は 기술 및 설계, 시공 리스크, 사업관리 평가 등을 통해 시공에 내재된 리스크를 평가한 후 재무 리스크를 반영하여 최종 시공 단계의 신용등급을 부여함. 사업과 관련된 기술적·재무적 리스크를 통합하여 타당성과 수익성을 분석함.
- Moody's社は 사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 내재된 시공 리스크, 시공자의 역량, 이행·보험 관련 역량, 유동성 및 재무적 여건, 자본력 등 5가지를 요인으로 구분하여 리스크를 평가함.

■ 건설 보증기관의 리스크 분석 및 관리 역량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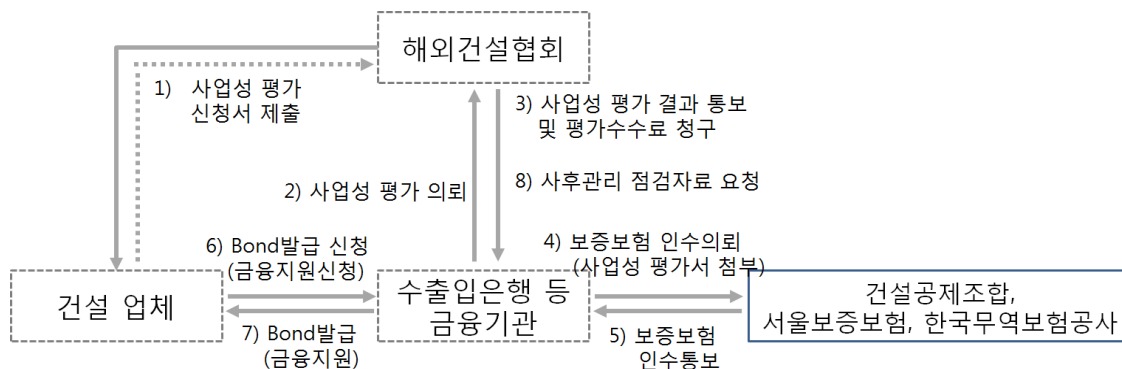
- 최근 5년 간 건설 보증기관의 보증 발급 규모는 급성장하여, 해외사업 보증 발급 금액은 전체 누적 실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 보증기관은 국내사업의 경우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금금보증, 하자보증 등의 형태로 보증을 발급하지만, 해외사업은 금융기관 지급보증의 보증(복보증) 형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1) 본고는 2016년 8월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건설 보증기관 해외사업 리스크 역량 강화 방안” 내부보고서 내용을 일부 요약한 것임.

2) HIS Global Insight, Global Construction Outlook, 2014.

- 향후 해외사업에 대한 보증시장이 확대될 때 지급보증의 보증(간접 보증)에서 직접 보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그림 1> 해외사업 평가를 통한 보증 발급 구조



자료 : 해외건설종합서비스(www.icak.or.kr).

- 해외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 체계와 같이 기술적 타당성 분석 역량 강화는 건설 보증기관의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타당성 분석을 외부 전문 기관에 의존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하여 건설 보증기관의 자체 역량과 내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성 평가 역량 보유가 필요함.
 - 보증 발급을 위한 사업성 평가 단계에서 현재 환경과 과거 사례 기반의 리스크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건설기업과 보증기관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역량 강화 전략,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시금석

- 건설 보증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데이터 및 정보 축적 인프라 구축은 향후 리스크 대응의 시의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 단기적으로, 과거 경험과 사례의 집대성은 기존 보증 상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수익 상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보증기관의 손실은 사업 수행 실패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 자체 조기경보 기능 확보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해외사업의 계약 조건과 발주처의 요구 사항이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여, 리스크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 건설기업의 참여 범위도 기획 및 계획 단계로 확대되고 있어, 건설 보증기관은 발주처나 계약자의 리스크 분석 역량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기임.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공동도급제도 정상화, 더는 미룰 수 없다

1983년에 도입된 공동도급제도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사수행 능력을 보완하거나 기술을 이전한다는 목적이 컸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단지 수주만을 위한 목적으로, 혹은 지역 중소 업체가 시공 참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다 보니 개선 대책도 공동도급 참여 업체 수나 지분을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2년에 발표된 감사원의 ‘공동도급제도 운용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공동도급제도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는커녕 막대한 손실을 전가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공사 대부분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지 못하고, 저가 낙찰로 인해 수익은커녕 손실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동도급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분별로 손실을 분담할 경우, 영세한 지역 중소 업체들은 단 1건의 공동도급으로 인한 손실만 떠안아도 회사의 존폐를 좌우하는 타격을 입게 된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건설업 등록업종을 구분한 뒤,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자,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라는 생산체계는 최근 들어 예외적인 제도의 확대로 인하여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다.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를 맡지만, 전문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제도다. 전문건설업체로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 잠식이란 혜택이 있지만, 종합건설업체로서는 공동도급시장을 전문건설업체에 뺏

기는 셈이다. 전기·통신공사에 이어 기계설비나 소방 공사 같은 전문공사 분리발주제도 또한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시장을 잠식하는 제도다. 공종별 분리발주제도에서는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의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가 될 수 있는 예외 조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건설업체의 공동도급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종합과 전문이란 이원적인 등록제도에 기반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공동도급제도와 운용 실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에는 종합과 전문이라는 이원적인 건설업 등록제도가 없다. 최근 SOC 투자 확대 등 공공공사 물량 증대, 적정공사비 확보와 낙찰률 상승에 힘입어 일본의 공동도급제도는 정상화되었다고 한다. 공동도급 참여 업체 수를 2~3개사 내외로 제한하고, 최소 지분을 20% 이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공동기업체 운용준칙 외에 별다른 정부 개입이 없다지만, 대표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수주 이후 분야별 운영위원회를 주도하고, 협업을 통한 기술력 이전도 하고 있다. 대표사간 참여사간 간에 평판(신뢰)을 중시하는 문화도 공동도급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공동도급제도의 정상화는 공사 물량 증대 외에 입찰제도 개선과 건설업체의 상생 협력 문화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도 공동도급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건설경제, 9월 8일>

이상호(원장 · shlee@cerik.re.kr)